

한전 35개 부지 개발 길 열려

- 지경위, 법개정안 통과로 가닥
- 삼성동 본사 부지는 매각 할듯

한국전력이 전국에 산재한 소유 부지 35곳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전의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는 한전이 개발하지 않고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는 한국전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경위는 한전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노후 전기 송전시설을 개량하는 용도에 쓰도록 한정했다. 흥물로 전략한 철탑과 전봇대를 건물을 씌워 가리거나 지하에 옮기는 목적에 쓰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한전의 지방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전이 부동산 개발 수익금을 해외 사업이나 정년 연장 재원으로 돌려 쓸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경위는 부지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한전의 계획을 변경해 전문회사에 맡기도록 했다. 전문성 없는 공기업이 부동산개발에 나섰다 입을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업 개발 대상에 들어간 35곳의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3조5,000억원에 달한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의무 할당제(RPS)도입, 지경위 통과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도입 등을 담은 신재생에너지개정법안이 22일 지경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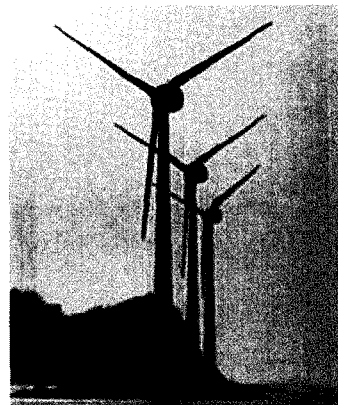
노영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정부발의를 포함 6개안을 통합 조정해 지경위 대안으로 제안하고 나머지는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안에 따르면 2012년 RPS를 도입함과 동시에 발전차액제도를 폐지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총의무공급량은 전체 전력공급량의 10%를 상한으로 해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개별 공급의무자별 공급량은 공급의무자의 발전량 등을 고려해 지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증 기관을 통해 판매하고 의무자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아울러 RPS제도 아래에서 경제성이 낮아 열위에 있게 될 태양광 등에 대해 공급의무량 할당제 및 공급인증서 발급 시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이외의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신축 증축 개축시 적용되는 이용의무량 산정기준은 건축공사비에서 에너지이용량으로 변경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해 해상풍력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및 기술개발 등을 아우르는 해상풍력 개발 로드맵을 늦어도 오는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출범시켜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기존 전력망에 연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 투자분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해안에 국내 최대 풍력발전단지 추진

이르면 2012년까지 서해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지식경제부는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말까지 100MW급 실증단지를 조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서해안에서 부지를 찾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일반적인 풍력발전기 한 기가 2MW급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들어서는 풍력발전기는 50기가 한꺼번에 들어서 국내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번 실증단지를 통해 풍력발전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경우 단지를 1~2GW 규모의 시범단지로 확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 본격 착수

• 금년중 모의시행을 거쳐 내년 전면 시행키로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일 「전기요금 산정기준」(지경부 고시)을 개정하여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모의시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비자들이 타 에너지원

과의 가격을 비교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도시가스요금·열요금·항공요금 등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에 있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현재 요금조정요인 발생시점과 실제 요금조정(정부인가) 시점간의 시차가 통상 6~18개월 발생하여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왜곡 등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작년 6월 이후「고유가 대비 에너지소비절약 대책」(09년 6월), 「2010년 지경부 업무계획」(09년 12월), 「2010년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10년 2월 3일) 등에서 이미 201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 본격 시행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김종신 사장 연임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월 1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오는 3월 3년 임기가 끝나는 김종신 대표이사 사장을 제5대 사장으로 선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들어 공기업 사장이 연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사장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발전소 수주 등 공로를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경 기술표준원 원장 취임



허경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이 2월 3일 기술표준원장에 임명됐다.

허 신임 기술표준원장은 부산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 항공공학 석사를 거쳐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대학원에서 공

공행정·정책개발 석사를 취득했다.

기술고서 14기(행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와 자원기술과, 에너지관리과, 자원정책과, 신산업기술표준부 등을 거쳤다. SK경영경제연구소 전문위원을 거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국 국장을 지낸 뒤 2009년 2월부터 지경부 신산업정책관으로 일해 왔다. KEA